제20대 대통령선거
정책 질의 답변서

- 국민의힘 / 정의당 -

제20대 대통령선거

100대 공약 제안을 위한 기독시민단체연대

2022. 02. 25

목 차

	분야		페이지
*	**총평**	- - - - - - - - - - - -	03
1	교육	- - - - - - - - - - - -	04
2	노동	- - - - - - - - - - - -	06
3	생태 • 환경	- - - - - - - - - - - -	11
4	이주난민	- - - - - - - - - - - -	14
5	장애인	- - - - - - - - - - - -	18
6	청년	- - - - - - - - - - - -	21
7	토지 • 부동산	- - - - - - - - - - - -	25
8	한반도	- - - - - - - - - - - -	27

문 의 김현아 사무국장 |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02-794-6200, cemk@hanmail.net

www.cemk.org

본 자료집은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파일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 (좋은교사운동 김영식 공동대표)**

- 국민의 힘과 정의당 모두 학급당 학생수를 낮추고, 대학에 대한 고등교육재정투자 확대에 동의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함. 그러나 국민의 힘의 경우 부작용을 이유로 고교학점제 전면도입을 재검토하고, 대학 서열화의 문제점을 외면하는 등 교육개혁을 기대하기 어려움. 정의당의 경우 고교학점제 현장 적용을 위한 4가지 선결과제를 제시하고, 성인학습자 전형 확대에 대한 긍정적 검토, 고등교육 재정투자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약속하는 등 교육개혁의 구체적 방법을 제시한 것은 높게 평가함. 답변서를 보내지 않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당도 조속히 교육개혁의 핵심과제에 대해 국민에게 답해야 할 것임.

***생태 환경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임준형 사무국장)**

- 국민의힘의 답변은 이명박, 박근혜 시절의 정책적 기조나 방향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는 기후위기 및 생태문제의 심각성이나 세계 다른 국가들이 지향하고 나아가려는 방향에 대한 학습이나 이해가 현저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원전을 중심에 둔 해결책을 말하지만 원전의 입지나 발생한 핵폐기물의 처리 등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의당의 답변은 오랜 기간 생태문제에 대한 고민과 공부를 통해, 주요 논점에 관한 좋은 해법들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신하영 청년위원**

-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에 대해서 양당 모두 임대료 부담 완화와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국민의 힘에서 제시한 기준임대료 설정은 이상적이나, 현재의 갱신요구권처럼 실제로 효력이 작동하지 않는 사례가 양산될 것입니다. 정의당의 독립청년 대상 월세 및 전세금 무이자 대출 지원정책은 독립의 기준이 모호한 가운데, 독립을 고려할 수 없는 조건의 청년들이 역차별에 놓이는 상황을 초래할까 우려됩니다.
- 청년의 일경험과 일자리 공급에 대한 정책으로 국민의힘에서 제시한 채용 비리는 질문에서 제시한, 일을 탐색하고, 경험할 기회를 보편 청년에게 제공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채용 단계의 비리는 청년들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노인과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등 다양한 층이 경험하는 채용차별 모두 '공정한 채용'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에서 제시한 청년 학자금대출 원리금 탕감은 청년들에게 빚보다는 미래를 생각하며 행동할 수 있도록 여유를 선물할 수 있겠지만, 기존 국가장학금 상환자에 대한 소급적용 등 재원부담이 천문학적으로 이어질 것이며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국민일자리보장제도가 현재의 국민취업제도와 질적인 차별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청년의 금융복지와 관련하여, 국민의힘에서 제시한 청년 한정 실업급여 제도는 시행착오를 위한 여유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 정의당에서 제시한 기초자산 형성 지원은 준비없이 사회에 내보내지는 양육시설 퇴소청소년, 다문화가정청소년 등으로 우리 사회에서 어떤 청년에게 이 제도가 필요한지를 고려해서 정교화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 정책은 청년보호자의 가처분 소득, 청년 본인의 보유 자산을 고려하지 않고 지급된다면 의미가 없는 정책이라 판단됩니다.

***토지/부동산 (희년함께 이성영 상임공동대표)**

- 지대추구 근절과 토지불로소득 환수 공약에 대해 국민의힘은 미달이고 정의당은 과하다.

지대추구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묻는 질문에 공급확대만을 말하는 국민의힘의 태도는 질문에 대한 논점 회피이며 정의당의 주택소유상한제 등은 시장원리를 존중하기보다는 규제만능주의로 보인다. 대장동 사건처럼 용도전환에 따른 토지불로소득 환수에 관한 질문에서도 국민의힘은 개발이익환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재 상황을 유지하겠다는 태도로 읽힌다. 정의당의 개발이익환수율을 높이겠다는 주장 역시 공허하다. 현재 건설완료 시점으로 매겨지는 개발이익환수제도는 대규모 개발의 경우, 모호한 건설완료시점으로 인해 법으로 정해진 20-25%도 제대로 환수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에 현장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적확하고 구체적인 공약이 아쉽다.

***한반도 (한반도평화연구원 윤환철 연구위원)**

-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정책과 입장은 문제 해결에 접근하지 못했던 '선 비핵화'론, 즉 북한의 행동에 묶여 있음. 또한 '선제타격' 등의 외마디 언사는 안보에 대한 기본태도를 의심하게 함. 반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각 행위자들의 입장을 상세히 살피고 상통할 지점과 상충되더라도 단계적으로 각자를 충족시키면서 대화를 이끌려는 적극성이 돋보임. 답변하지 않은 정당과 후보에 대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함.

교육

질의 1. 미래교육에서 지향하는 학습자 맞춤형 교육은 교사 대 학생 비율을 낮추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으로 낮추도록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인구 수 감소와 함께 교육재정을 줄이자는 의견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현재 학급당 학생수는 유치원 16.7명, 초등 21.8명, 중학교 25.2명, 고등학교 23.4명이므로 20명으로 낮추는 것은 바람직하며 우선 과밀학급부터 해소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실제적인 미래교육에 적합한 교수학습체제 및 여건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학생수 급감에 따라 교육재정 전체규모를 줄이자는 의견에는 동의하기 어려우나 교육부문간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학급당 학생수 20명 개선은 미래교육과 맞춤교육을 위해 필요합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한반 20명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첫 번째 공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기재부는 학생수 감소한다고 교부금 등 교육재정 줄이려고 하는데, 시대착오적입니다. 지금은 한반 20명 등 미래교육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재정 지원을 할 때입니다.

질의 2.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고교학점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고교학점제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대입제도 개선과 고등학교 교사의 증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제안하는 논술형 수능 중심의 대입전형과 성인학습자 전형 확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학생의 진로와 소질에 따른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나 이를 기계적, 일괄적으로 도입할 경우에는 심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2025년 전면 도입은 재검토 되어야 함. 미래사회변화, 2022 개정교육과정 등을 반영한 새로운 대입제도를 2024년까지 마련할 계획임.	고교학점제는 2025년부터 전면 시행이나 사실상 내년 2023년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고교학점제는 내신, 대입, 교원, 시설 등 4가지 사항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교원은 증원 위해 예산 확보하고 관련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대입은 고교학점제에 맞도록 수능 절대평가 확대, 학생부 전형과 수능전형으로 단순화, 내신과 교사의 정성적 기록으로 학생부 전형 실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내신은 성취평가제가 더 확대되어야 합니다. 성인학습자 전형은 평생교육 차원 뿐만 아니라 직업교육 정상화 차원에서도 의미있는 방안입니다. 학력학벌 차별금지법과 함께 선취업 후학습 시스템을 위해 필요합니다. 고교교육 정상화에도 일정 정도 기여할 것입니다.

질의 3. 대학 간 서열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대학에 대한 재정투자를 통해 교육환경을 먼저 개선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대학 재정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대학 이름에 의한 서열화가 아니라 대학의 연구력, 교육력 등 대학 경쟁력 차이에 따른 서열화는 오히려 강화되어야 함. 우리나라 대학경쟁력을 전반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OECD 평균 수준 이상으로 고등교육 재정 투자가 확대되어야 함.	대학서열은 정부의 재정지원 격차도 한 원인입니다. 서울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다른 학교와 견줄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 만큼 국공립대부터 재정지원을 고르게 하여 교육환경 및 대학 교육의 상향 평준화를 모색하겠습니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나 고등교육균형발전법으로 세계 10위 경제대국에 걸맞는 재정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OECD 수준 고려하여 재정투자를 늘리면서 대학 균형발전을 꾀할 것입니다.

***교육 영역 총평 (좋은교사운동 김영식 공동대표)**

- 국민의힘과 정의당 모두 학급당 학생수를 낮추고, 대학에 대한 고등교육재정투자 확대에 동의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함. 그러나 국민의힘의 경우 부작용을 이유로 고교학점제 전면도입을 재검토하고, 대학 서열화의 문제점을 외면하는 등 교육개혁을 기대하기 어려움. 정의당의 경우 고교학점제 현장 적용을 위한 4가지 선결과제를 제시하고, 성인학습자 전형 확대에 대한 긍정적 검토, 고등교육 재정투자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약속하는 등 교육개혁의 구체적 방법을 제시한 것은 높게 평가함. 답변서를 보내지 않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당도 조속히 교육개혁의 핵심과제에 대해 국민에게 답해야 할 것임.

노동

질의 1. 후보님께서는 우리나라가 'OECD 가입국가 중 산재 1위' 라는 오명을 없애기 위한 최우선적 과제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소규모 사업장, 건설업 등 산업재해 취약사업장에 대한 산재예방이 최우선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중소영세기업 사고도 대부분 대기업 하도급 작업에 기인하므로 대기업의 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하청업체의 안전수준을 높이는 대·중소기업 상생형 산업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택배물류 증가로 택배종사자의 과로사가 증가하여 사회문제화되고 있습니다. 택배노동자 등의 건강관리와 산업재해 예방에 사물인터넷, 센서,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기술을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산재 예방에는 노사의 공동노력과 안전문화의 정착이 필수적입니다. 산재예방활동에 대한 노사의 공동노력에 대한 컨설팅과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는 차별과 불평등입니다. 불안정, 비정규 노동자, 여성, 이주, 영세기업 노동자 등 열악한 노동조건과 불평등과 차별이 있는 곳에서 산재사고 등 생명과 안전의 위협이 더 큰 것이 현실입니다. 정의당은 차별과 불평등 해소야말로 생명, 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시민을 위한 기본법』 제정을 통해 비정규직,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예술인, 소상공인까지 모두 노동기본권 보장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예고되어 있었던 올해 1월에만 38명, 하루에 1.6명꼴로 산업재해 때문에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끼임(34%), 추락(23%) 등 후진국형 사고의 비율이 높습니다. G8 국가, 선진국이라는 자랑이 부끄럽습니다. 2021년 1월 26일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애초 발의되었던 여러 제정안에 비해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의 적용범위가 축소되었습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수위가 낮아지고, 법인에 대한 벌금형 및 징벌적 손해배상의 하한이 정해지지 않아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6월 9일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재개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건물붕괴사고의 경우나 같은 해 10월 6일 여수시 웅천동 요트선착장에서 발생한 홍정운 현장실습생 사망사고는 동 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대재해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의 하한을 도입하고, 인과관계 추정 규정, 양형 절차 특례규정 및 공무원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법률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지난 1월 위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또한, 다치거나 아플 경우 소득손실없이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상병수당(소득 70%)을 도입하겠습니다. 현행 산재보험제도를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든 먼저 산재치료 및 요양을 받는 〈신청-승인〉제도에서 〈선보장〉제도로 전환하는 '원스톱 산재보험 서비스'를 도입하겠습니다. 발주·설계·시공·감리자에게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안전과 산재사고 감소를 위해서는 생명안전 분야의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런 생명안전 일자리가 비정규직으로 사용되거나 외주화, 하청 등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 △생명안전 분야 일자리 직접고용 원칙 적용, △위험작업 2인 1조 업무 적용, △생명안전분야 적정인력 기준 규정 및 현실화, △중소사업장 공동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공공성 생명안전 일자리 창출,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업종, △규모 무관하게 전면 적용, △30인 혹은 10인 미만 사업장의 공동안전보건관리자 선임 허용해야 합니다.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현장의 업무에 대한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각종 산업공정 등에 대한 노동자 당사자 및 시민의 알권리와 참여권 역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으로 노동자 시민의 알 권리 보장하고 노동자, 노동조합의 실질적인 작업 중지권 보장하겠습니다.

질의 2. 공립학교에서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노동교육에 대해 준비된 정책이 있으신지요?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학생들이 노동의 신성함을 깨닫고 그에 따른 각종 권리와 의무를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에서의 노동교육은 일의 의미와 가치,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 사용자의 경영권과 노동권 보호 및 사회적 책무, 진로와 직업탐색, 안전한 직장생활 등 노동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균형감 있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노동교육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교육과정, 직업훈련과정 등 모든 교육과정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동안 노동교육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미흡하였다고 봅니다. 각급학교에서 노동교육이 강화되도록 정부의 예산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각급학교 및 직업훈련과정에서 노동교육과 안전보건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겠습니다.	'국민 공통 노동교육과정'을 만들겠습니다. 노동교육을 통해 노동의 가치와 보편적 권리로서의 노동기본권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을 통해 행복을 추가하고, 자아실현과 공동체 의식을 통해 연대를 실천하고, 타인의 노동에 대한 감수성을 키워 차별과 노동인권 침해 문제에 맞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노동교육은 대한민국 노동의 시작점입니다. 무엇보다 학교는 시민으로 사는 삶을 배우는 곳입니다. 그런데 정작 학생들이 졸업 후 노동자가 되어 맞닥뜨릴 상황에 대한 교육은 오랫동안 부재했습니다. 교육부에서 본격적으로 노동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한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입니다. 교육과정 총론 상에 '민주시민교육 및 일과 노동에 포함된 의미와 가치'가 삽입되고, 직업계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과 산업안전보건' 과목이 신설된다는 점은 고무적입니다. 그러나 비판을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모든 민주시민'을 대상으로 해야 할 노동인권 교육이 직업계고 학생에 국한되었다는 점, 일방행적 교육을 넘어, 모의 단체교섭 등 실습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작업중지권'과 같이 실제 취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권리는 교육의 영역을 넘어, '산업안전'의 측면에서 깊이 있게 다뤄져야 합니다. 즉 실제 노동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화한 노동교육까지 나가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생태전환교육, 민주시민교육 등도 더욱 심화하여야 합니다. 노동교육 확대에 따른 교육현장 교권/노동권 보장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협약'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협약은 독일 통일 이전인 1976년, 학생들의 올바른 정치교육을 위해 서로 다른 정치적 견해가 있는 서독의 정치교육학자들이 합의하여 채택한 일종의 수업지침입니다. 학교에서 정치적 상황을 학생들에게 이해시켜서 균형 잡힌 정치적인 행위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독일 통일 후에는 그 대상이 독일 국민 전체로 확대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이 정치·경제·사회적 쟁점의 이해, 정보습득 및 자율적 사고가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기 위한 교육으로서 교육과정, 학습교재에 반영하는 등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생활, 수업에서 정치 참여 등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행사하는 일반적인 참정권, 자기결정권이 관계 법령, 학칙 등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3. '인국공(인천국제공항)' 논란처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취업대기자들의 반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비정규직들의 정규직화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으신지요?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득보다 실이 크고, 취업준비 청년들에게도 고용박탈감을 안겨 준 최악의 정책의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 상시지속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일시 간헐적 업무는 비정규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근로조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인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 정규직은 유연성을 높이고, 하청·비정규직은 고용보호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연공급 임금체계 개혁과 고용유연성을 높여 비정규직의 사용 유인을 축소해나가겠습니다.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비정규직 사용 기준을 도입하되, 비정규직을 일정비율 초과 사용하는 기업은 고용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도록 하여 비정규직 총량 규모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겠습니다. 안정적인 경제 운용으로 정책 불확실성을 줄여 기업들이 비정규직에 의존하려는 요인을 줄이겠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그 자체로 불평등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의당은 먼저 상시지속업무에 대한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을 도입하겠습니다. 약 230만 명 규모가 되는 파견/용역/호출 근로 등의 간접고용에 대해서는 파견대상업무의 단계별로 축소하고 하도급 업무 등 직업안정법 적용을 확대하여 상시지속업무에 대한 파견업 금지로 나아가는 3단계에 걸친 과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용역업무의 경우 업체 변경 시 노동조건 승계 명문화,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임금인상을 이유로 단가인하를 요구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원청의 사업비에 책정된 노동자 인건비를 하청업체나 용역업체를 통해서가 아닌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과정을 통해 노동권을 보호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한편 용역/파견 등은 '다중사용자성'의 문제 때문에 노동3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어려운 구조에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청과 하청을 실질적으로 공동사용자로 인정하여 각종 노동관련 법제도에서 파견/용역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조합 등의 결성을 지원하여 스스로 노동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공동사용자성 인정의 범위를 넓혀 원-하청이 노동법의 사용자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약 20만 명에 달하는 민간위탁 형태의 간접고용 경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다가 중단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재추진하기 위해 약 1만 개에 달하는 민간위탁 사무의 적절성과 상시 지속성 등을 평가하여 상시업무는 공단, 재단화 또는 공무직화를 통해 정규직화를 진행하고 민간위탁으로 남게 되는 업무도 민간위탁 계약에서 위탁업체 변경시 노동자 고용승계 조항 명시,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 준수, 노동자에 대한 임금 직접지급 의무 부과 등을 명시하여 노동조건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아웃소싱, 파견, 용역 등의 간접고용 방식의 노동을 많이 사용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고용부담금'을 부과해 비정규직, 간접고용의 오남용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정책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에도 최근 급속하게 늘고 있는 단시간노동자에 대해서도 '평등수당'을 노동시간의 부족으로 생기는 소득의 부족을 보완하도록 하며 최소노동시간보장제를 도입하여 노동시간 계약의 최저선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평등수당으로 가용가능한 예산은 현재 고용노동부의 '장시간 개선 사업장 지원; (150억 원)과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주 근로시간 단축형, 고용창출장려금고용장려금 신청 및 지원에 관한 규정(640억 원) 재정을 합쳐 800억 원이 당장 활용 가능합니다.

질의 4.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 이후의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ILO 기본협약 비준에 따른 후속 입법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노동계는 현행 노조법 중 설립신고제도 폐지, 노조임원과 노조대의원 자격의 자율 결정, 필수유지업무 폐지 및 최소유지업무 신설, 근로시간면제제도 폐지를 후속 과제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설립신고제도와 같이 어느 정도 보완입법이 가능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노조 임원 자격, 근로시간면제제도 및 필수유지업무 폐지 등과 같은 사항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해 가겠습니다. 아직 비준하지 아니한 핵심협약은 제105호 협약(강제근로 폐지에 관한 협약)인데, 비준을 위해서는 국가보안법 등 형사·사법체계의 정비가 필수적입니다. 이는 다른 법체계와의 연계 속에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ILO 핵심협약 비준에 따른 노조법을 개정하겠습니다. ILO 기준에 맞게 고용관계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노동3권) 보장하겠습니다. 노조법 제2조 제1호 근로자 정의 규정을 개정하고, 행정관청의 근로자성 심사를 이유로 한 노조설립방해 금지하기 위해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삭제하겠습니다. 하청, 간접고용노동자의 결사 자유, 교섭권 보장하기 위해 노조법 제2조 제2호 사용자 정의규정 개정하겠습니다. 기업별 노조의 임원·대의원 자격을 재직자(종사자) 조합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ILO 기준에 어긋납니다. 노조법 제17조 제3항, 제23조 제1항 단서 삭제하여 기업별 노조의 임원 자격도 노조 규약으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ILO 기준에 맞게 결사의 자유, 노조설립의 자유 보장하기 위해 노조법 제12조 제3항 삭제하겠습니다. 행정관청의 설립신고서 반려규정을 삭제하여 노동자의 결사 자유를 보장하고, 행정관청의 설립신고증 교부 지연 등 부당한 개입요소 차단하겠습니다.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정한 규약, 결의처분,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한 단체협약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됩니다. 노조법 제21조, 제31조 제3항 및 제93조 제2호 중 벌칙 규정을 삭제하겠습니다. ILO 기준에 맞게 노사가 자율적으로 전임자 급여를 정하도록 하고, 정부 개입 요소를 차단하겠습니다. 노조법 제24조 제2항(근로시간면제 한도), 제4항(한도를 초과하는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 무효), 제81조 제4호 중 해당 부분 삭제하고, 노조법 제24조의2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삭제하겠습니다. ILO 기준에 맞게 교섭 대상 확대, 산별교섭 촉진하겠습니다. 노조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개정, 산별·지역별 교섭 및 협약체결권 명시, 교섭대표노조 관련 규정 삭제하겠습니다. ILO 기준에 맞게 복수노조 자율교섭 보장, 소수노조 교섭권 보장하고,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를 폐지하겠습니다. 산별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식 촉진,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노사가 정하되 원래 상한인 2년으로 개정하겠습니다. 공익사업장의 쟁의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 필수유지업무제도 폐지, 최소유지업무 신설, 필수공익사업에서 대체근로 허용규제 삭제, 긴급조정 대상 합리적 축소와 긴급조정 결렬 시 직권 중재회부 조항을 삭제하겠습니다. 손배·가압류를 제한하겠습니다.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 노조법 제4조, 교원 노조법 제3조의 정치활동금지 규정을 삭제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일터에서 기본 원칙과 권리에 관한 국제기준이 통용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내 법제와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질의 5. 5인 이하 사업장에서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에 대한 앞으로의 로드맵이 있는지요?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지금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초기인 만큼 이 법이 산업현장에 안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사업주 처벌만을 목적으로 하는 적용확대, 인과관계 추정은 사업주들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되어 산업 및 노동시장 모두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나, 책임 범위 확대 등 추가 제도개선방안 논의는 현행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정착된 이후에 충분히 준비를 갖출 수 있는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즉각 개정해야 하며 배제되는 노동자와 시민 없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적용해야 합니다. 입법 과정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는 제정안의 본래 취지와 내용이 크게 훼손되면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별도로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면 적용, 인과관계 추정, 공무원 처벌 도입 등 개정입니다, 구체적으로 ① 5인 미만 적용제외, 50인 미만 적용유예 등 삭제 전면 적용, ② 인과관계 추정, ③ 공무원 처벌 조항, ④ 양형 절차 특례 도입 ⑤ 건설, 조선업 등의 발주처 공기단축 처벌, 건설현장 인접 장소 사고 등 적용 대상 확대입니다.더는 일하다 죽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생태 • 환경

질의 1. 현재의 2030NDC에 대한 견해와 탄중위에서 발표된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해 시민사회는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시급한 변화가 필요한 시기에 2030NDC의 목표치는 낮고, 시나리오는 기후위기를 초래한 책임을 가진 기업들을 오히려 책임에서 해방시켜 준 격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시나리오는 '녹색성장'이라는 말로 포장되어 그간 온실가스 배출로 위기를 초래한 기업들에게 오히려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고 있으며, 비현실적인 공학적 해결책들을 포함시키는 등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후보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고, 갈등해결방안에 대해서도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오.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녹색성장은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녹색기술을 신성장 동력으로 하여 경제산업 구조는 물론 삶의 양식까지 저탄소형으로 전환하는 국가 발전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다만, 그것은 실현하는 현재의 정책과 절차는 한계가 있어 여러 갈등요소를 고려하여 분명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원자력 정상화 등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방안 전면 수정하겠습니다.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 감축목표는 준수하되, 현정부의 감축시나리오는 전면 수정하여 재수립하겠습니다. 에너지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조정하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 확정하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을 확대하고, 탄소세 도입은 신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탄소세 도입은 국제적인 탄소국경조정제도 추이와 연동하여 검토하되, 산업계와 국민생활의 부담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은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동시에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개념. 우리나라에서 녹색성장을 처음 도입한 이명박 정부 이후 원래 의미가 매우 퇴색되었음. 특히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는 경제성장과 환경 문제의 충돌 시 경제성장을 우선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등 사실상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녹색성장은 더 이상 긍정적인 개념 아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될 때도 국민의 힘 의원들이 법안에 '녹색성장'을 꼭 넣어야 한다고 주장함. 이명박식 녹색성장을 계승하겠다는 선언을 한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함 '성장'에 초점이 맞추어진 녹색성장으로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움. 신기술과 디지털을 접목한 녹색기술 등 첨단기술 등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를 보면 결국 대기업 중심으로 신성장동력을 확보해서 꾸준히 경제성장을 추진하겠다는 것임 기후위기 대응을 제1국정과제로 삼아 수량적 성장이 아닌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에 두어야 함. 탈탄소사회로의 전환으로 노동자, 사회적약자, 중소기업 등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반드시 '정의로운 전환'이 되어야 함.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와 손실이 일하는 사람과 사회적약자 등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취약산업과 노동·지역·계층·젠더·세대에 대한 현황 파악과 영향평가를 정기적으로 진행하여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수립할 것임 또한, 전환과정에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를 보장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엄격히 지켜 갈등관계를 조정할 것임

질의 2. 일각에서 주장하듯 원전으로 석탄화력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단순 계산만으로도 신고리 5,6호기 급의 원전 약 20기 이상이 필요하고, 기존 원전의 노후화로 인해 폐쇄할 시 신규 건설은 훨씬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건설시한을 생각할 때 시급한 기후 문제의 해결책으로서 원전은 기능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처치곤란한 폐기물과 사고위험성을 고려한다면 원전은 미래의 에너지로서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 원전이나 기후위기의 직접 원인이 되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로 가는 방향의 전환은 시대적 요청이자 세계적 흐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탈원전과 에너지 전환을 정책목표로 내놓았지만 임기중 석탄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은 줄어들기는 커녕 늘어난 상황입니다. 후보의 에너지 정책에서 현 정부와의 차이점을 말씀해주시고, 만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공약으로 걸었다면 에너지 전환에 대한 목표(발전비율, 달성년도)와 실현 방안을 설명해주십시오.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2017.10. 현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를 왜곡하고, 탈법적 절차로 탈원전 선언, 이후 탈원전 정책의 근거로 사용하며 부작용이 속출하였습니다. 기후위기 심화로 태양광, 풍력보다 원전의 역할이 커지고 있을 강화할 필요성이 더 커졌습니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화석에너지 감축,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조화한 탄소중립 추진을 통해 우리 미래 에너지의 길을 개척하겠습니다. 탈화석에너지 기조는 유지하되 탈원전 기조에서는 벗어나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25%, 화석에너지를 40~45%, 원자력을 30~35% 선으로 유지하며, 원전을 기저전원으로서 활용하겠습니다. 동시에 지역사회와 상생 및 소득창출이 가능한 한국형 재생에너지 확대모델을 발굴하겠습니다. 산림 훼손, 농지 개별입지에서 탈피하여 계획 입지, 건물태양광 설치를 확대하고, 소유·경영 분리로 인한 영농 태양광 수용성 문제도 개선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지연하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세제 지원을 시행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소부장 제조업의 법인세를 공제하고, 인허가 인증 패스트트랙을 마련하겠습니다. 경제성과 환경성, 주민 수용성을 두루 갖춘 해상풍력 육성 계획도 함께 실현하겠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2030년까지 모두 가동을 중지하고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전면 중단하겠음 핵발전소는 「탈핵기본법」을 제정하여 2040년 탈핵을 달성하겠음. 또한, 「원자력진흥법」을 폐지하고 신한울 3·4호기 등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겠음. 소형모듈원자로 개발에 대한 투자를 재생에너지 기술과 에너지 저장장치 기술 투자로 전환하고 핵발전산업에 대한 각종 투자는 핵발전기술개발이나 해외수출이 아닌 핵발전소 안전관리, 해체, 핵폐기물 처리에만 하도록 전환하겠음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2030년까지 50%를 달성하겠음. 2023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20GW 이상 설치하여 180GW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확보하겠음. 또한, 분산형 전원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에너지 수요지역과 가까운 곳에서 에너지 생산할 것을 공약함 2050년에는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만으로 100% 전력생산을 달성하겠음

질의 3. 기후위기로 인해 어느 때보다 생태계 회복과 보전의 중요성을 절감하는 시기입니다. 개발은 지자체를 통해 이익을 환수한다 하더라도 결국 전체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결국 현재의 개발수익의 수혜자가 될 수 없는 미래세대에게 전가됩니다. 특히나 난개발로 인해 대한민국 곳곳이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으며, 공항계획 등은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지역의 숙원사업이라는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면제함에 따라 적자운영을 면치 못할 개발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이뤄집니다. 이러한 개발에 대한 후보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개발 사업을 통한 경제성장'에 대한 후보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한정된 국토에서 다양한 개발 사업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난개발을 막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면서 지속가능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 생물다양성이 우수한 지역은 보전하고 녹색공간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건강한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생물다양성이 우수한 지역을 변화된 기후에 적합하게 보전·복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인구밀집 지역의 옥상하천습지유휴지 등 가용지에 식재 등으로 녹색복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시박 등 외래종의 번식을 방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대대적인 제거작업을 실시 하겠습니다.	개발사업을 통한 경제성장은 환상에 불과함.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던 4대강 사업과 같은 대규모 토건사업은 생태계훼손으로 생태가치를 떨어뜨리고 유지, 보수, 복원 비용만 지출될 뿐임 개발중심의 토건사업 감독을 강화하고 「환경영향평가법」과 예비타당성 조사 운용지침을 정비하겠음. 생태적 가치를 정량화하여 평가과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음 신공항 건설 계획은 전면 중단하고 무분별한 공항개발 방지를 위한 법령을 개정하겠음.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등 국립공원 생태계 파괴 개발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겠음 생물다양성협약 목표달성을 위해 육상과 해상 보호구역을 30%까지 확대하고, 이 중 1/3은 엄격한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음 탄소흡수원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 그린벨트, 산림 등의 보호를 강화하고 갯벌 세계자연유산 지정을 확대하겠음

***생태/환경 영역 총평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임준형 사무국장)**

- 생태 분야에 대한 국민의힘과 정의당의 답변을 살펴본 결과 국민의힘의 답변은 이명박, 박근혜 시절의 정책적 기조나 방향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는 기후위기 및 생태문제의 심각성이나 세계 다른 국가들이 지향하고 나아가려는 방향에 대한 학습이나 이해가 현저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원전을 중심에 둔 해결책을 말하지만 원전의 입지나 발생한 핵폐기물의 처리 등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의당의 답변은 오랜 기간 생태문제에 대한 고민과 공부를 통해, 주요 논점에 관한 좋은 해법들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주 난민

질의 1. 난민 관련 정책 질문 : 현재 난민 정책은 난민인정 절차의 공정성 및 인프라가 부족하고, 난민 및 인도적 체류자에 대해서 적합한 처우를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난민인정절차 관련 공정성 확보를 위한 난민법 개정, 인프라 구축, 난민위원회 상설화 하는 것에 대한 '찬반'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현행 난민제도에 존재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깊이 공감합니다. 난민심사절차 개선 및 난민·인도적 체류자의 처우 보장을 위한 난민법 개정, 인프라 구축, 난민위원회 상설화 하는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난민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난민심사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난민위원회를 독립적이고 공정성을 갖춘 상설 심판원(tribunal)에 해당하는 기구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난민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강제송환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 취업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최저생계가 가능하도록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공정한 난민인정의 요체는 정확한 사실인정입니다. 이를 위해 난민 발생 지역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지역전문가와 해당 지역 언어 전문가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연구를 지원하겠습니다.	찬성입니다. 이번 정의당 심상정대통령후보 공약으로 인권을 존중하는 난민법 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의 2. 외국인 구금 관련 정책 질문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인신구속에 대한 사법심사 보장, 외국인 구금 상한 설정 및 이주아동 구금 금지에 대한 '찬반'을 밝혀주시고, 찬성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추진방식 및 시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찬성합니다. 현재 출입국관리법상 보호 대상 외국인에 대해 인신보호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데, 인신보호법을 개정하여 그 성격상 구금에 해당하는 보호에 인신보호법이 적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출입국관리법상의 보호 중 강제퇴거의 심사결정을 위한 보호에는 기간의 상한이 있으나 강제퇴거의 집행을 위한 보호에는 기간의 상한이 없습니다. 현재에는 3개월마다 법무부장관의 연장승인심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승인심사를 독립된 기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호의 기간이 총 12개월을 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동권리협약(CRC)에 따라 체류자격 미비를 이유로 아동을 구금해서는 안됩니다. 2011년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에 대해 이주아동의 구금을 하지 말라는 권고를 내렸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주아동에 대해 구금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아동을 그의 의사에 반해 부모로부터 분리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보증금 예치를 조건으로 하는 부모의 보호일시해제를 널리 사용하도록 하고, 부모비동반 아동 및 부모로부터 분리가능한 일정 연령 이상의 아동을 위해 외부 위탁시설 및 돌봄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보호해야 하는 경우 아동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호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이주민에 대한 인신구속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수용시설에 대한 개선, 공정한 심사절차 확립, 이주아동 구금 금지에 찬성합니다.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이주민 구금 개선을 위한 출입국관리법을 비롯한 관련 법제도 개선을 국정이행과제에 반드시 포함시키고, 취임 1년 이내에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3. 외국인 노동자 정책 관련 질문 :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인 고용허가제도 및 체류 불안정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조건이 열악하고 인권침해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외국인 노동자 정책을 마련하고,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것에 대한 '찬반'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에는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뿐만 아니라 전문인력 외국인, 외국국적동포(F-4), 유학생 등 다양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일부 농축산업이나 제조업, 서비스업 등에서는 외국인이 없으면 생산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어떤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건 차별과 인권침해를 겪지 않도록 외국인 노동자 정책을 개선할 것입니다. 현행 고용허가제만으로는 다양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노동자를 모두 포괄하여 안정적 외국인력정책을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력 도입단계부터 국내 노동시장에 적응하고 통합되는 단계, 그리고 선별적으로 정주형 이민자로 정착하는 것까지 고려한 미래지향적인 내외국인 상생의 외국인력정책을 추진하도록 법 · 제도를 정비하여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이러한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에 대해 찬성합니다.	찬성입니다. 이번 정의당 심상정대통령후보의 공약으로 인권이 존중되는 '이주노동제' 도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행 '고용허가제'의 독소조항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노동영주권'제도를 도입하여,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가 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4. 미등록 이주아동 및 보편적 출생등록제 관련 질문 : 제한적인 내용으로 인해 비판받고 있는 현행 법무부의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의 문제 및 외국인의 출생등록 제도가 없는 문제가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습니다. 현행 법무부의 대책을 전면적으로 보완(기간 수정, 해외 출생 포함, 범칙금 납부 방법의 합리화 등)하는 것과 '보편적 출생등록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찬반'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법무부가 마련한 것으로서 그 취지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출생하고 15년 이상 거주한 소년소녀에게만 적용이 되므로 실제로 국내에서 출생하지 않았지만 초중등교육을 모두 이수한 소년소녀에게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행 법무부의 대책을 전면적으로 보완(기간 수정, 해외 출생 포함, 범칙금 납부 방법의 합리화 등)하고, '보편적 출생등록제'를 도입하는 것을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적극적으로 검토하는데 찬성합니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지 않는 외국인 아동을 위해 등록부를 별도로 마련해야 하고,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외국인 아동의 출생이 신고되고 등록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의 국내 미등록 아동 개선책은 아동 일부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또 다른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국내 거주 이주아동이 보다 안전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반드시 할 것입니다. 또한 보편적 출생등록제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하며, 이로 인하여 아동이나 부모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질의 1. 현재의 장애등록제도는 장애인 등급 중경 단순화로 표현될 만큼 제도의 도입 취지에 무색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의학적 일률적 판정 기준 대신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 실현을 위하여 도입된 이 제도가 올바르게 정책되려면 장애인의 욕구 판정에서부터 서비스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전달체계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재는 여전히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 전달체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장애계의 의사는 얼마나 충실히 정책에 검토할 계획인지 말씀해주시고, 구체적인 실행 방향과 예산의 범위까지도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장애인의 필요와 환경을 고려하고, 전달체계에서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현행 장애등록제도를 개선 운영하겠습니다. 장애유형별 장애인정 기준과 장애판정심사위원회 구성·기능에 관한 장애인복지법 법령 및 고시를 재검토하여 불합리한 부분은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장애인의 수 및 장애인의 복지욕구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장애인 복지정책 입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본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기존 장애등록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장애인의 필요에 맞는, 필요한 만큼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장애인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개인별 맞춤 계획을 수립한 후 장애인에게 직접 예산이나 바우처를 지원하고, 지원된 예산은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보조기기 구입, 재활서비스 이용 등에 사용하도록 설계하여 복지서비스 선택폭을 확대하겠습니다. 특정 서비스와 시설에서만 이용이 제한된 현행 바우처의 단점도 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 대상 사회서비스 수급자 선정 시, 장애인과 장애인 배우자를 제외한 부양의무자(가족 관계자)의 재산이나 소득을 서비스 선별과정에서 제외하고,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등 장애인 대상 사회서비스 선정기준에서 소득·재산 기준을 삭제해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지자체 장애인지원사업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평가시스템을 마련해 장애인 지원 사업 격차도 해소하겠습니다. 개인예산제는 기존의 서비스로 제한되지 않도록 신규 개별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에 대한 예산을 추가 배정할 예정입니다.	장애인등록제를 폐지하고 수요자 중심 체계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서비스법으로 전면 개정하고, 국가장애인서비스공단 설립 및 지역장애서비스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장애인권리보장특별기금 설치 및 장애인지예산을 도입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교육, 노동, 주거, 문화 수준 등의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OECD 평균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지디피(GDP) 대비 0.6%('17)에 불과한 한국의 장애인 복지지출을 OECD 평균인 2.02%('17)로 확대하겠습니다.

질의 2.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넘어 이미 장애인복지법은 산만하고 비대한 법률이 되었습니다. 권리옹호와 서비스지원의 내용이 혼재되어 있으며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시혜적 차원의 공급자 중심 제도들이 남아 있는 법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면서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고 기존의 장애인복지법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장애인 권리체계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장애인위원회를 설치하고, 진정한 수요자 중심의 정책체계를 도입하며, 학대에 국한되어 있는 지금의 권리옹호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안이 모두 담겨 있는 법안입니다. 후보께서는 이 장애인권리보장법안에 대하여 어떤 입장이고, 이 법안의 조속한 제정 필요성이 동의하시는지, 조금 더 진일보한 입법을 위하여 추가적인 고려사항을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지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장애인 관련법은 많지만 이 많은 법들이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강화할 수 있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제안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정치·경제·사회·문화 참여권, 장애인정책결정과정 우선참여권,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 자기결정권, 선택권 외에도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수준에 걸맞는 법률 및 이에 따른 장애인복지가 이루어지도록 장애인 법령체계를 검토하여 보완하겠습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장애인 이동·교통권·건강권 보장 등 장애인의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제도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재정비하겠습니다. 국가장애인위원회도 관련 기관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설치여부를 고려하겠습니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은 지난 총선, 대선부터 이어져 온 정의당의 공약입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조속히 제정하겠습니다.

질의 3.　가난한 장애인을 양산하는 지금의 사회구조 속에서 장애인은 당당한 시민으로 살아가기 매우 어렵습니다.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시설에서 거의 평생을 살아야 하는 장애인이 아직도 많으며, 경증 장애 위주로 운용되는 장애인 취업지원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기준과 맞물려 사실상 장애인으로 하여금 경제적 주체가 아닌 무기력한 약자로 살아가길 강요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장애인이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잡는데 매우 중요한 탈시설에 대한 입장이 어떠하신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경제활동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탈시설, 지역사회 자립을 지향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봅니다. “지역사회자립 기반 조성”이라는 방향성으로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준비 중입니다. 활동, 이동, 여가, 체육, 교육 등 사회서비스를 장애인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공공 부문 4.0%로, 민간 부문 3.5%로 상향 조정하고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겠습니다.　전국 광역시도에 ‘장애인 근로자 지원센터’ 설치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장애 유형에 적합한 직무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평가 시 직업재활 등 장애인 고용의 질적 평가 요소도 추가하겠습니다.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빅데이터, 인공지능, IOT 등 4차 산업 핵심 인재를 육성하는 직무 개발 및 직업훈련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2개소에 불과한 장애인 디지털훈련센터를 ‘맞춤훈련센터’ 수준으로 17개 광역시도에 확대 운영하고, 사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디지털훈련센터에서 관련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초능력을 습득하여 사업체 현장에서 실무 중심의 숙련 과정을 진행하도록 학습과 실무를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시각장애인 안마사 방문 서비스 도입하는 등 독특한 직업적 특성을 가진 장애인의 고용 기회도 발굴·확대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대상기관을 공직유관단체까지 확대하고, 구매비율을 1%에서 2%로 높여 장애인의 고용과 경제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장애인 노동권 보장은 장애인고용공단, 노동부와 보건복지부, 지자체 간 긴밀한 협조 체제가 이루어질 때 더욱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 현황으로서 ‘장애인 일자리 상황판’을 직접 챙기겠습니다. 단순히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임기 끝까지 장애인의 일자리가 확대되는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공부문과 민간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민간기업 장애인 기업 지원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장애인기업에 대한 사회적 기업 인증 확대, 장애인기업 지원에 대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탈시설 10년 로드맵을 마련하겠습니다. 신규 장애인 거주시설 설치 금지, 장애인 거주시설 10년 동안 단계적 폐쇄와 함께 비리 및 인권침해 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강화 등 거주 장애인의 인권도 보호하겠습니다. 탈시설 장애인을 위해 탈시설 종합지원체계도 전면 구축하겠습니다. 장애인 노동권과 일할 권리를 위해 최저임금법에서 유일하게 적용제외된 장애인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고 장애인도 최저임금 적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형 장애인 공기업을 설립해 지자체 주도 하에 다양한 공익사업을 개발하고 장애인 50% 이상 고용, 최저임금 이상의 일자리 제공, 장애인 맞춤형 직업훈련, 직업개발, 작업환경 제공을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장애인 권익옹호활동 등 공공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청년

질의 1. 청년 1인가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시설보호종료아동(만18세)의 자립 지원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년 세대의 월급으로는 '내집마련'은커녕 전월세를 감당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지옥고'로 대표되는 청년들의 주거빈곤율도 다른 세대보다 높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기 내 어떤 정책을 실현하실 계획이십니까?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청년 전월세) 취약한 계층인 월세 세입자들에게는 지금도 주거급여, 전세임대주택 및 긴급주거비 지원, 공공임대 보증금을 순수월세로 환산하는 방안 등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월세 세입자들에 대하여는 전세임대, 매입임대 또는 공공임대주택 등의 임대보증금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급여금액을 보다 확대(2022년 서울 2인 가구 36.7만원)하여 부담을 덜어드리고, 최저소득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주거급여에 대해서는 주거급여 대상자를 기준중위소득 46%에서 50%로 확대하고 기준임대료를 100% 현실화하며, 기준임대료의 지역별 기준(현행 4개 급지)을 세분화하여 현실에 맞게 기준임대료를 설정하여 급여를 현실화하는 제도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1인 가구 분리 기준 연령(*현행 30세)을 낮춰 청년 1인 가구도 주거급여 지급대상이 되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청년 '내집마련' 관련) 현행 분양제도하에서는 축적한 자산이 부족한 청년들의 청약 자체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청년층이 양질의 아파트를 건설원가 수준으로 구입하되, 분양가의 20%를 먼저 내고 80%는 장기 원리금 상환을 통해 마련할 수 있는 <청년원가주택>을 5년 내 30만호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또한 5년 이상 거주 후 원가주택 매각을 원할 경우 국가에 매각토록 하되, 매매차익의 70%까지 입주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거안정과 재산형성을 재산형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 집 마련'은 중요한 과제이자 소망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청년은 그런 꿈을 꿀 사이도 없이 세입자로 살아갑니다. 현실의 청년들이 살아가는 바로 그 공간부터 살만한 집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전월세 주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1) 횟수 제한없이 임차인 계속 거주권 보장 (2) 독립청년 대상 월세 지원(월 20만원, 3년간), (3) 전세 보증금 무이자 대출, (4) 청년 주거급여 기준 65%로 확대, (5) 최저주거기준 상향(고시원 등도 포함하여 적용, 1인당 최저면적 25㎡로 확대, (6)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및 집주인 갑질없고 저렴한 사회주택 확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질의 2. 코로나19를 지나며 많은 청년들이 학습과 취업 등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학습권 침해, 채용시장 위축, 진로를 위한 다양한 경험 기회 상실, 사회적 관계 단절, 그리고 이로 인한 불안과 무기력, 우울과 자살충동은 청년이 내일을 꿈꾸기 어렵게 하는 혹독한 현실입니다. 청년들의 진학 기회와 일경험 및 일자리에 대한 후보님의 비전과 실행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2021년 중앙정부 청년정책 과제가 308개에 달하나 불공정하고 불평등하게 기회가 분배되는 일련의 상황들을 접하면서 청년들은 오히려 배신감을 느끼고 정부와 여당에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청년은 수동적 시혜나 퍼주기의 대상이 아니고,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통해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우리 사회의 핵심 구성원임은 인정하고 그에 맞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청년들은 취업 기회가 적은 것에도 좌절하지만, 취업의 기회가 공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분노하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한 취업 기회를 보장하고, 무엇보다 채용 비리를 근절함으로써 취업과 고용에서의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불공정 채용 비리 근절입니다. 노조의 고용세습, 편법적 친인척 고용 승계, 전·현직 임직원 자녀 특혜 채용 등을 차단하겠습니다. 고용 세습을 원천적으로 무효화하는 법령조항을 추가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채용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채용절차법을 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절차와 방법에 관해 명문화함으로써 공정한 채용문화를 선도하겠습니다. 둘째, 공정채용 제도화입니다. 300인 이상 모든 기업에서 면접관과 응시자가 친인척일 경우 상호 제척하거나 기피를 의무화하도록 채용절차법을 개정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채용 전형 결과와 탈락 사유를 모든 구직 청년에게 고지하는 것을 의무화하겠습니다. 셋째, 임금정보공시제를 시행하여, 능력과 성과 중심의 직무 노동시장을 구축하여 임금경직성을 해소하고 공공과 민간 부분의 임금격차를 축소하겠습니다. 업종, 직무, 직급, 성별, 고용형태별로 임금정보를 공시하여 청년의 직업 선택을 강화하고 대·중·소 기업간 임금격차를 완화하겠습니다.	학교와 가족을 떠나 새로운 출발을 하는 시기, 첫 번째 직장을 구하는 시기는 인생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대학은 제대로 된 교육훈련을 제공하지 못했고 취업문은 더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사회진출을 준비해야만 하는 청년들을 위한 긴급 지원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첫째, 취업교육 지원을 위해 (1) 평생교육바우처 지급, (2) 내일배움카드 자부담 면제, (3) 한국폴리텍대학 등록금 면제, 둘째, 취업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에 대해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1) 저소득층 청년 생계비 대출(햇살론 유스) 이자 지원 및 만기 연장, (2) 학자금 대출 원리금 50% 탕감, (3) 300만원 이내 긴급적정대출 등 금융복지 제공, 셋째, 마음건강 치료를 위해 (1) 심리치료 지원, (2) 심리치료센터 설립 등을 약속했습니다. 그 리고 근본적으로는 '국가일자리보장제' 도입을 통해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고자 합니다. 이제까지 일자리는 개인의 노력 문제, 그리고 기업의 몫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자리 창출 정책은 교육훈련과 민간기업의 고용유지금 지원 등이 중심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취업자 개인과 기업에게 맡겨둘 상황이 아닙니다.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국가일자리보장제는 일하고자 하는 모든 청년에게 생활임금과 사회보험을 보장하는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광주형 일자리나 서울시 청년뉴딜일자리 사업과 같이 기업과 지자체, 시민사회와 정부가 함께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최소한의 안정적 소득과 일경험, 지역사회와의 관계형성 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질의 3. 보통의 청년들은 성인이 되면 아무런 자산과 자원 없이 사회로 떠밀리게 됩니다. 대학에 진학한 청년들은 수천만원의 학자금(+생활비) 대출을 안고 졸업하여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대출금을 갚는 데 수년에서 길게는 십수년을 보내야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은 학력이나 경력을 이유로 차별적 임금을 받으며 상대적 빈곤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생활경제나 재무 관리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본 적 없기에 이들의 소득-지출은 건전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늪에서 청년들은 실패가 두렵고 꿈에 도전 할 여유가 없습니다. 청년기초자산제, 청년기본소득, 청년예술인기본소득, 학자금대출이자감면 등 다양한 사회적 지지 방식이 논의되는 가운데, 후보님께서는 청년의 출발선 앞에 어떤 정책들로 청년에게 꿈꾸고 도전할 기회, 건전한 금융복지를 지원할 계획이십니까?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청년에 대한 무조건적 현금지원은 복합적인 청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청년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도 없습니다. 청년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면, 단지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들어주고 필요한 서비스와 함께 지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도약'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현금수당 자체가 아니라, 청년의 삶을 보듬고 직업 역량, 사회생활 역량을 키우기 위한 사회서비스와 연계한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국민취업제도 등 제도들이 있지만, '구직'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청년들이 잠시 도약을 준비하면서, 교육, 훈련, 상담도 받고 사회공헌 활동도 하면서 사회생활 역량을 키우는 것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니트(NEET) 청년을 포함하여 저소득 취약 청년에게 진로 탐색, 취·창업 구직, 사회공헌 등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과 함께 청년도약준비금을 지급하고,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청년(18~34세)에게 중장기 재산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 본인 납입액에 따라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청년도약계좌를 제공하면서 청년 지원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발적 이직이 많은 청년 대상으로 청년기(19-34세) 동안 3회에 한해 상호 의무를 전제로 자발적 실업에 대해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자기학습 능력이 뛰어난 청년들이 직업적인 역량을 스스로 강화할 수 있도록 19세 성년이 되는 날, 300만원의 청년학습바우처를 지급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청년기초자산제를 가장 먼저 주장한 원조 정당입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부모의 능력으로 인생이 좌우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청년들 사이의 불평등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20세가 되면 3천만원의 기초자산을 제공하겠습니다. 대학에 가거나 독립할 집을 구하거나 창업을 할 때, 기초자산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생활에 꼭 필요한 재무교육, 금융교육, 경제교육을 제공하기 위하 청년생활금융상담센터를 지자체마다 설립하여 운영할 것입니다. 생계위급 또는 빚더미 속에서 힘들어 하는 청년들을 돕겠습니다. 찾아오는 청년들에게 재무상담을 필수화하여 무조건 대출이 아니라 채무조정과 복지 연계를 동반하는 적정대출을 시행하겠습니다.

질의 4. 앞서 언급했듯이 청년들에게는 마음건강돌봄도 중요한 화두입니다. 취업 준비 과정에서, 가족과의 관계에서, 직장과 일터에서, 다양한 이유로 청년들의 마음건강에 적신호가 켜졌고, 그것은 청년들의 우울증과 자살률 통계를 보면 쉽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마음건강지원사업도 청년들의 폭발적인 신청으로 조기 마감된 바 있습니다. 민간기관에서 심리상담을 받는 비용은 청년들이 부담하기에는 문턱이 높습니다. 청년들의 마음건강돌봄을 위해 국가건강검진이나 지자체 보건/복지센터 프로그램의 확대 정책을 고려해주실 수 있는지요?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자살예방법 개정을 통해 자살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청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로 하여금 청년에 대한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청년의 마음건강을 직접 국가가 돌보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의 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음건강돌봄 사업의 국가건강검진이나 지자체 보건/복지센터 프로그램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실 산하에 청년 마음건강특위를 두고, 전국에 청년마음건강센터를 설치하고 상담사를 배치하며, 상담을 무료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마련했습니다.

***청년 영역 총평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신하영 청년위원)**

- 청년정책 중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에 대해서 양당 모두 임대료 부담 완화와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국민의 힘에서 제시한 기준임대료 설정은 이상적이나, 현재의 갱신요구권처럼 실제로 효력이 작동하지 않는 사례가 양산될 것입니다. 정의당의 독립청년 대상 월세 및 전세금 무이자 대출 지원정책은 독립의 기준이 모호한 가운데, 독립을 고려할 수 없는 조건의 청년들이 역차별에 놓이는 상황을 초래할까 우려됩니다.

청년의 일경험과 일자리 공급에 대한 정책으로 국민의 힘에서 제시한 채용 비리는 질문에서 제시한, 일을 탐색하고, 경험할 기회를 보편 청년에게 제공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채용 단계의 비리는 청년들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노인과 경력단절여성이 채용 과정에서 겪는 연령차별, 장애인이 경험하는 채용차별 모두 '공정한 채용'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에서 제시한 청년 학자금대출 원리금 탕감은 청년들에게 빚보다는 미래를 생각하며 행동할 수 있도록 여유를 선물할 수 있겠지만, 기존 국가장학금 상환자에 대한 소급적용 등 재원부담이 천문학적으로 이어질 것이며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국민일자리보장제도가 현재의 국민취업제도와 질적인 차별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청년의 금융복지와 관련하여, 국민의 힘에서 제시한 청년 한정 실업급여 제도는 시행착오를 위한 여유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 정의당에서 제시한 기초자산 형성 지원은 준비없이 사회에 내보내지는 양육시설 퇴소청소년, 다문화가정청소년 등 우리 사회에서 어떤 청년에게 이 제도가 필요한지를 고려해서 정교화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 정책은 청년보호자의 가처분 소득이나 청년 본인의 보유 자산을 고려하지 않고 지급된다면 의미가 없는 정책이라고 판단됩니다.

▌토지 • 부동산

질의 1. 대장동 사건처럼 토지용도전환으로 인한 막대한 토지불로소득이 부동산개발이 일어나는 대한민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토지용도전환 및 인허가로 발생하는 토지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한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토지의 용도전환은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본차익의 일부를 공공의 이익으로 사용하거나 공적으로 환수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토지의 용도전환과 함께 일어나는 토지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에는 개발사업자가 안게 되는 위험이나 창의적인 가치창조 노력 등에 의한 이익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이익 모두를 환수하겠다는 것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토지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적절한 수준에서 환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토지의 용도전환과 토지 개발에 관한 여러 법률에서는 부담금 제도나 공공시설의 설치, 임대주택의 건설 등과 같은 개발이익을 부분적으로 환수하여 공공의 이익으로 사용하게 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런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불법적 탈법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사적으로 편취하고자 하는 시도까지 막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점에서 불법적 탈법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사적으로 편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책임을 묻고, 사적으로 편취한 이익을 환수하는 것이 정의일 것입니다. 대장동 사건은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짬짜미를 통해 개발이익의 환수를 최소로 하고, 특정인이 그 이익을 대부분 가져가도록 만든 것'이 문제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개발 책임자는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조항을 넣자는 실무자의 의견을 묵살하였고, 3천억원의 개발이익을 환원하겠다는 제안을 한 경쟁사를 짬짜미 심사로 탈락시키는 방법을 동원하여 특정인에게 개발이익을 몰아주었습니다. 이런 불법적 탈법적 행위에 대해 단죄를 해야 정의가 바로 설 것입니다. 따라서 과도한 민간이익을 막기 위해서는 일부 개발이익 환수율을 높일 필요도 있지만 공모에 의한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방지하고 공모 과정을 감시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임의로 수익률을 제한하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무주택자 내 집 마련과 집값 안정을 위해 강제로 토지를 수용하여 조성한 공공택지가 '땅 장사', '집 장사'의 수단으로 전락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발생시키는 악순환을 차단하겠음. 공공택지에는 공공주택만 100% 공급한다는 원칙을 세워 공공택지 민간매각을 금지하고, 공공이 직접 개발하여 장기공공임대주택과 저렴한 공공자가주택을 공급하겠음 유명무실한 개발이익환수제도를 강화하겠음. 초과개발이익이 발생하면 현재 20~25%에 머물러 있는 개발이익 환수율을 50% 이상으로 올리겠음. 아울러 민간사업자의 폭리를 차단하기 위해 사업비 및 투자액 대비 상한제를 두겠음 도시개발법을 바꿔 공공주택특별법과 같이 공공주택 공급 물량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개발사업의 공공성을 확대하여 불로소득 발생을 차단하겠음

질의 2. 부동산가격 폭등은 빈부격차 심화 및 세대간 갈등, 근로의욕 감퇴 및 사행심 만연 등 우리 사회에 여러 부작용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부동산가격 폭등의 근원인 지대추구를 근절하기 위한 후보님의 정책과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지난 4년 반 동안 부동산가격이 폭등한 것은 저금리와 유동성 탓도 있지만 서울과 수도권의 공급부족이 중요한 원인이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집값 상승의 원인이 투기에 있다고 판단하여 부동산 세제 강화와 대출규제를 통한 수요억제에 집중했지만 매매가격 상승이 가속화되었을 뿐 아니라 임대료도 상승하였습니다. 그 결과 무주택자들의 좌절감이 커지고 주거 상향 이동도 어려워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집값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 일부 무주택자들은 '영끌'해서 아파트 매입에 나섰고 그 결과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가 악화되었습니다. 주택가격 안정은 주거안정과 주거 상향이동을 위해 중요하지만 정상적인 거래까지 어렵게 만드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또한 주택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면 영끌해서 아파트를 장만한 사람들과 대출기관에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공급 확대에 대한 확실한 신호를 보냄으로써 시장 불안심리를 진정시키고 지속적인 공급을 통해 가격을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2의 토지개혁'을 추진하여 집값 안정을 가로막는 투기로부터 국토를 해방시키겠음. 토지초과이득세를 도입하여 법인과 개인이 투기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유휴부지를 시장에 나오게끔 하고, 이를 국가가 매입해서 공공목적으로 활용도를 높일 것임 주택소유상한제를 도입하여 사실상 지대추구를 목적으로 존재하는 1가구 다주택을 엄격하게 규제하겠음. 2주택은 세금을 중과하고, 3주택 이상은 소유를 제한하겠음 부동산 불로소득을 엄격히 환수하겠음. 우선 종합부동산세의 기능을 정상화하여 기득권 양당이 야합해 후퇴시킨 1가구 1주택 종부세 기준액 11억 원을 9억 원으로 원상회복할 것임. 토지분 별도합산 종부세 최고세율을 올리고, 현재 종부세가 적용되지 않는 상가와 빌딩, 분리과세 토지 등에도 포괄 적용하고, 임대사업자 특혜인 합산배제를 폐지하겠음

***토지/부동산 영역 총평 (희년함께 이성영 상임공동대표)**

- 지대추구 근절과 토지불로소득 환수 공약에 대해 국민의힘은 미달이고 정의당은 과하다.

지대추구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묻는 질문에 공급확대만을 말하는 국민의힘의 태도는 질문에 대한 논점 회피이며 정의당의 주택소유상한제 등은 시장원리를 존중하기보다는 규제만능주의로 보인다. 대장동 사건처럼 용도전환에 따른 토지불로소득 환수에 관한 질문에서도 국민의힘은 개발이익환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재 상황을 유지하겠다는 태도로 읽힌다. 정의당의 개발이익환수율을 높이겠다는 주장 역시 공허하다. 현재 건설완료 시점으로 매겨지는 개발이익환수제도는 대규모 개발의 경우, 모호한 건설완료시점으로 인해 법으로 정해진 20-25%도 제대로 환수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에 현장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적확하고 구체적인 공약이 아쉽다.

▌한반도 (대북관계, 평화, 통일)

질의 1. 후보께서 갖고 계신 한반도 평화 분야의 철학을 기술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한반도에서 평화가 파괴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함. 우선 남북 간에 전쟁이 없어야 하며 (소극적 평화 보장) 나아가 상호 신뢰구축과 협력을 통해 평화를 보장하는 적극적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봄. 남북한은 1950년 6.25남침으로 평화가 파괴된 바 있으며 지금도 휴전상태에 있는 바 적극적 평화가 실현됐다고 할 수 없음. 따라서 휴전상태를 종식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며 남북 간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적극적 평화를 이루어야 하는 과제가 있음. 더 나아가 한반도 통일을 이룩하여 한반도 주변 정세를 평화적으로 조성하고 한반도 내외로부터 평화를 위협하는 요소를 근원적으로 제거함으로써 항구적인 평화를 이룩해야 함. 현재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북한의 핵무장임. 북한은 핵 미사일을 첨단화하여 우리를 위협하고 있으며 이는 한반도 전체와 한반도 주변의 긴장을 고조시켜 이 지역 국가들의 군비경쟁을 유발하고 있음. 따라서 현 시점에서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는 출발점은 북한의 비핵화임. 북한이 현재 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당면 과제로서는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을 억제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자주국방력과 한미연합전력을 강화해야 함.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방법론은 이미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이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시되어 있음. 북한이 이를 이행하는 결단을 하고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하기 시작하면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도 완화될 것이며 이러한 정세변화에 따라 우리나라도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을 시작할 것임.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시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을 추진하여 남북 간의 공동 번영을 추구할 것이며 이는 남북 간의 적극적 평화를 보장할 것임.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상황이 아주 어렵습니다만, 상황이 어려울수록 원칙과 기조가 분명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쟁은 안 됩니다.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무책임한 강경책도 안 됩니다. 평화적 수단을 통해 평화를 달성해야 합니다. 나만 안보 걱정 없이 살겠다고 군비증강하고, 상대가 행동하기 전에는 나도 절대 어떤 행동도 하지 않겠다는 경직된 자세로는 비핵화도 적대적 관계 청산도 불가능합니다. 특히 '강력한 힘이 평화를 보장한다'는 구태의연한 안보관에 따른 경항모·핵잠수함 사업 등 '안보 사치'를 하면서 코로나19로 도탄에 빠진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은 소홀히 하고, 보수 정부를 능가하는 군비증강으로 북의 반발과 맞대응에 따른 '안보 딜레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국가안보의 미명으로 구성원을 희생하고 수단으로 삼는 정책에서 구성원의 결핍과 불안으로부터의 자유를 달성하고, 구성원을 안보의 주체로 삼는 '인간안보'로 전환해야 합니다. 상대의 안보에 대한 우려를 인정하고 협력을 통해 모두의 안보를 이룰 수 있는 '공동안보'로 전환해야 합니다. 특히 북한의 총 GDP의 1.5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지출하면서도 '튼튼한 안보가 대화를 뒷받침한다'는 낡은 교리에 매달려 보수 정부를 능가하는 군비증강을 지속하고 한반도평화프로세스와는 모순과 갈등을 빚는 엇박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정책을 국방과 외교 정책에서도 통합적으로 전개해야 합니다.

질의 2. 종전선언에 찬/반 정견과 그 이유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서 그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진 않음. 다만 현재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북한의 핵문제인데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아무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별도로 추진하는 것은 반대함. 현재 종전선언을 추진할 경우 여러 가지 위험요소들이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데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도 없다고 봄. 특히 북한은 종전선언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소위 이중기준 철회라는 명분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 시비하지 말라고 주장하고 있음. 이는 북한의 핵무기를 인정하고 그 바탕 위에서 종전선언을 추진하자는 것으로서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음. 또한 북한의 핵을 억제하기 위한 국방력 강화와 한미연합 훈련 중단, 유엔사 해체 등 우리의 안보체제를 근본적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전선언은 추진할 수 없음.	저와 정의당은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재개의 필요성에 강하게 공감하며 평화프로세스 입구로서 정치적 선언인 '종전선언'이 조기에 성사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객관적 상황은 여의치 않습니다. 북한은 '종전선언'에 대해 적대관계 청산이라는 전제조건을 내걸고 있고, 연초에 극초음속미사일 등의 시험발사를 잇달아 실시하더니 이른바 모라토리엄 유예 재검토를 천명했습니다. 미국도 동맹인 한국 정부가 종전선언을 하자니까 끌려오는 모양새지만, 기꺼이 하려는 자세는 보이지 않습니다. 정치적 선언으로서 의의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남·북·미·중 정상이 모이는 게 좋지만, 베이징 올림픽 '외교 보이콧' 사태에서 보듯이 이번 정권 내에서 정부의 핵심관계자들이 의도했던 '제대로 된 종전선언'이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이번 정권 내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지지 않는다 해도 한반도평화프로세스가 재개되어야 한다는 것과 그 입구로서 정치적 선언의 필요성마저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내적으로 수구적인 정당과 인사들은 '종전선언이 주한미군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고 한미동맹을 흔들 것이다, 비핵화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선거를 앞둔 쇼에 불과하다'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비핵화를 실제로 어떻게 달성할지 제시하지는 않고 반대만 하는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역으로 상황이 이처럼 여의치 않은데도 그것을 극복할 대안 제시도 없이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 하자는 여당의 주장도 관성적이고 무책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을 타개해야 합니다. '선언'이 성사될 수 있는 최소한의 합의와 이후에도 프로세스가 지속될 수 있다는 비전에 대한 공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정의당은 비핵화를 우선하는 미국이나 국내 보수세력, 적대관계 청산을 우선하는 북한 등이 평화프로세스 재개에 동의하고 '선언'이 이후 지속될 프로세스의 입구로서 역할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한 합의에 기초한 '평화선언'이 오히려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초기 단계 핵심 현안(북한의 핵활동 동결-대북제재 완화(스냅백도 가능) 등 교환) 합의, ▶비핵화-평화체제 전환의 단계적·병행적 추진 원칙 확인, ▶비핵화-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4자 평화회담 개시, ▶상대체제 존중-흡수통일 및 무력에 의한 전복 정책 완전 폐기, ▶전쟁 불가와 군비증강 대결 중단 등입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평화선언'을 4자 정상들이 참가한 가운데 가급적 빨리 성사시키겠습니다.

질의 3. 개성공단을 재개하거나 다른 경제협력 방안을 개발할 의사가 있으신지요?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여러가지 방식의 남북 간 경제 교류협력은 남북 간 신뢰를 구축하고 장차 통일의 기반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를 지지함. 그러나 지금은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의미있는 남북경협을 추진할 수 없음. 북한이 비핵화를 결단하고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취한다면 우리는 이에 상호주의적으로 경제지원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임. 그때 개성공단의 재개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임. 앞으로 남북경제협력은 단순한 가공무역이나 경공업 협력이 아니라 북한 경제의 현대화와 빠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더 근본적이고 본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북한이 비핵화를 완료하면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을 추진하여 남북 간의 공동발전을 추구하고 경제통합을 추진할 것임. 북한이 비핵화를 결단하고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면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에 관해 북한과 협의할 것임.	개성공단은 우리에게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안보 차원에서도 큰 이득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 정부가 행한 개성공단 폐쇄는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강화된 UN 안보리 제재에 경협은 금지되어 있기에 우리의 의지만으로 그냥 재개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남북이 이미 합의한 개성공단 재개 등을 대북제재의 예외 대상으로 하는 등의 대북제재 완화를 북의 핵 활동 동결 등 비핵화에 대한 초기 가시적 조치와 교환하자고 미국 등 국제사회를 설득하고 성사시키려는 적극적 노력을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질의 4 후보께서 한반도 평화 관련 자문을 구하는 정책 입안자는 누구입니까?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는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과 신범철 전 외교부 정책기획관 등을 포함하여 폭넓게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전 국회의원이 심상정 후보의 안보 특보를 맡고 있습니다. 당에는 한반도 특위(위원장 : 황순식 경기도당 위원장)가 있고 여러 명의 자문위원이 있습니다만, 사정상 공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의 5. 우리의 평화 정책과 미국, 일본, 중국 등 주변국의 외교적 지향이 상이할 경우, 지지를 얻기 위해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저는 비핵.번영의 한반도 실현 비전을 갖고,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전을 구현하고, 비핵화 달성시 관련 당사자 간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임.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에 있어서 한국은 중재자도 촉진자도 아닌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당사자인바 우리가 적극적인 노력과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함. 북한 문제에 관한 확고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체제를 공고하게 구축하며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임.	관련국들이 기존에 합의한 것을 존중하고, 그것에 기초해 문제를 풀어가되 현재 제기되는 문제를 풀기 위한 구체적 해법을 가지고 이해 당사자들을 설득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남, 북은 물론 미, 중, 일, 러 등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도 다 합의를 했던 것은 9.19 공동성명이고, 북미가 합의했으되 한국도 동의한 것에는 가장 최근 것으로 싱가포르 합의가 있습니다. 9.19 공동성명의 경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항구화, 적대적 관계의 청산 등 한반도 평화는 물론, 이런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도 한반도에 분단을 야기하고, 전쟁과 적대적 정전 상태를 지속하게 했던 한반도 주변 지역 질서를 탈냉전의 협력 질서로 전변시키는 것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취지와 내용을 담았습니다. 비록 6자회담이 좌초되고 북의 핵 능력이 크게 증강되는 가운데 미·중 간 전략적 경쟁마저 심해져 9.19 공동성명의 정신이 퇴색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핵심 당사자들의 합의한 기조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2018년 이후 어렵사리 한반도평화프로세스가 재개되고 싱가포르 북미 합의 등이 있었지만, 비핵화 대 제재해제 등 적대적 정책 철폐의 우선순위, 폭 등을 둘러싼 이견 끝에 '하노이 노딜'이 되었고, 장기공존되더니 북의 모라토리엄 재검토 등으로 자칫 좌초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싱가포르 합의에서 재확인했듯이 한반도 문제를 포괄적으로 풀어야 한다, 2021년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확인했듯이 기존 합의를 존중한다, 대화를 통해서 풀 수밖에 없다는 데는 핵심 당사자들이 이견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중단된 대화를 어떻게 시작해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재개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후 안정적으로 프로세스를 지속할 수 있느냐 하는 방법론에 대한 이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질의 3 답변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핵심 내용에 대한 합의에 기초한 평화선언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미국, 북한 등이 각각 우선적 관심을 두고 있는 사안에 대한 초기 단계 행동에 대한 합의, 단계론-병행론이라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론에 기초했기에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도 일찍부터 '병궤론'을 주장하고 있기에 동의를 할 것입니다. 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런 취지에 대해 대북, 대미, 대중 특사 등을 파견해 설명하고 동의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다시금 국제사회로 김정은 위원장의 손을 잡고 나오겠습니다.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최고 지도자 차원의 정치적 결단을 주저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손도 이끌겠습니다.

*한반도 영역 총평 (한반도평화연구원 윤환철 연구위원)

-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 모든 질의에서 북한의 선 비핵화 없이는 평화진전, 종전선언, 경협(개성공단)을 추진할 수 없다고 하며, 평화외교 방법론에 대한 답변에서도 한미동맹 중심의 대북압박만을 제시함으로써 평화프로세스의 절대조건을 북한의 행동으로 국한하고 있음.(정책입안자: 김천식, 신범철)
- 평가: '선비핵화' 주장은 북핵 문제, 혹은 한반도 비핵화 이슈의 해결 과정에서 어떠한 중간 생산물도 산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논리적으로도 불능에 가까운 전제임. 따라서 동 후보는 어떠한 정책 행동도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으로 평가됨. 평화프로세스의 원론에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이는 동 후보의 '선제타격', '사드 추가 배치' 등의 외마디 공약들과 정면충돌하는 입장으로 판단이 불가능한 혼란을 보여주고 있음.

-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평화적 수단에 의한 선도적 평화프로세스 기조로 '인간안보', '공동안보' 개념을 도입하여 군비증강에 따른 안보딜렘마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며, 종전선언이 평화프로세스의 '입구'라고 인식하지만 수구세력의 반대와 국제적 합의(남·북·미·중) 난항 문제가 있고, 미국의 비핵화 주장과 북한의 적대관계 청산 주장을 모두 단계론적으로 충족하는 '평화선언'을 대안으로 제시함. 개성공단 재개는 안보리의 대북제재의 예외 인정과 북의 핵 활동 동결을 교환하는 방식을 현실적 대안을 보임.(정책 입안자: 김종대, 황순식)
- 평가: 진전된 안보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종전선언을 평화프로세스의 '입구'로 인식하는 점에서 우월한 판단력을 갖고 있음. 또한 9.19공동성명 정신의 유효성, 단계론적 접근으로 남북한과 주변국의 대화의 장을 형성한다는 판단 역시 매우 적확하며, 대화 과정에서 개성공단 등 경협 문제가 풀릴 수 있다는 인식도 현실적임. 다만, 종전선언을 '평화선언'으로 대체하는 주장의 논거중 수구세력의 관성적 주장을 거론한 것은 후보의 다른 주장들과 부합하지 않음.

- 총평: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정책과 입장은 문제 해결에 접근하지 못했던 '선 비핵화'론, 즉 북한의 행동에 묶여 있음. 또한 '선제타격' 등의 외마디 언사는 안보에 대한 기본태도를 의심하게 함. 반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각 행위자들의 입장을 상세히 살피고 상통할 지점과 상충되더라도 단계적으로 각자를 충족시키면서 대화를 이끌려는 적극성이 돋보임. 답변하지 않은 정당과 후보에 대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함.